

안경환의 법과 문화



박근혜 정부와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탄생하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릴 듯하다. 안대희 지명자가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초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더니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는 물러나는 정홍원 총리나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였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소신으로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을지의 문이었다. 그의 지명 소식을 듣고 적어도 몇 시간은 막연한 기대에 부푼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의 총리 취임에 이어 대통령이 담화에서 촉구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관피아의 폐해'가 척결될 지도 모른다든 성급한 기대도 있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직접적인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보편적인 관념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다.

그동안 언론의 후광을 통해 국민의 눈에 비친 안 후보자의 이미지는 감격적인 소신과 정열의 상징이었다.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수사관의 소임을 다해 '국민검사'

의 애정을 얻었던 막연한 추억 때문이었다. 그 막연한 추억이 정식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반쯤 퇴색되었다.

변호사 6개월 만에 16억 원 수입료는 그와 같은 거물 범죤인에게는 놀라운 액수가 아닐지 몰라도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는 크게 어긋났다.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관예우'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기업 세금소송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는 이해관계 있는 사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정신과 내용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지위에서 담당하지 못한, 공백한 변명으로 위기를 넘겨서는 새 총리의 위용과 동력이 크게 손상된다.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더해지는 국회청문회를 가지면서 그의 위상이 얼마나 더 추락할지 걱정이었다. 어쨌든 그의 자진 사퇴로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보다 근본적인 우리는 과연 누가 명실공히 국무총리다운 총리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등 행정부를 '통할'할 권한을 준다.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여' 라는 단서 아래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적어도 서너 명이 그 자리를 스쳐갔다. 총리에게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책임총리제'의 공약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제왕적 대통령 구조에 지나지 않았다. 독자적인 정치력이 없는 총리는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다.

근래 어느 원로 언론인의 표현대로 대한민국 총리의 본질은 '물레방아'다. 스스로 힘으로는 돌지 못하고 대통령이 공급해 주는 물만급만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바퀴. 그게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실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조직의 구성을 추가로 밝혔다.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등 두 부총리와 청와대 안보실장을 더하여 '4륜 구동형 책임총리제'라고 명명했다.

총리실에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권한과 역할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들이 총리를 보좌할지, 아니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견제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관건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라는 빌미로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즐겼다. 박

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그런 인상을 풍겼다.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지, 제왕을 추대한 게 아니다.

백만 번 읊은 이야기지만 특정인을 조속히 체포하라, 엄벌에 처하라, 외국 언론의 지적대로 듣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법절차까지 간섭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사사건건 대통령이 친히 행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국정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취약파라하던 반세기 이전의 그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딸 대통령의 권력구도에는 김기춘 실장으로 상징되는 '유신의 추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제 대통령이 달라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총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가개조'라는 야심찬 과업이 약간이라도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 웬지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 예감이 부질없는 기우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빈다. 그래야만 국민도, 나라도 '세월'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 위원장)

社說

우후죽순 요양병원 안전강화 시급하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계기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과 관리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돈 벌이에 열안이 돼 안전은 사실상 뒷전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34곳으로 2010년 말의 17곳에 비해 3년 새 17곳이나 늘어났다. 전남지역도 2011년 43곳에서 2012년 55곳, 지난해 말 59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일반 병원보다 설립이 쉬운 데다 장기입원을 선호하는 노인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과잉 공급에 따라 병원마다 노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안전과 환자관리가 대부분 부실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참사를 낸 장성 요양병원만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인증까지 받았지만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대피시설도 부실한데다 환자관

리도 제대로 못해 화를 키웠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태반이고 운영과 관리, 시설 면에서 대부분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현행 소방법에 화재 발생 시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대피 시설 등이 제외돼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요양병원들이 비치하고 있는 것은 소화기와 일반 경보기가 고작이다.

이 같은 검찰기시 관리와 허술한 규정 탓에 요양병원 화재 사고는 해마다 1~2건씩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관리감독과 안전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조사에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 확충과 소화 장비, 대피 시설 보강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내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는 과거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6월4일)에 투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30~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한 곳씩 설치됐고, 광주·전남에는 393곳이 마련됐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

사전 투표는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고 거주지의 투표소를 찾아가야 했던 과거 부재자투표와 비교하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는 점이 장점이다. 투표를 걸인 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선거전문가들은 실제로 주민

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대학생과 비교적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층의 투표율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후보자들도 사전투표라는 새로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광주 시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후보들은 조직을 풀가동해 젊은 층을 공략하며 지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전투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다. 실제로 승합차량 등을 이용,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관공여행을 가장한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적극적 단속에도 나서고 유권자들도 감시활동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선거일과 달리 사전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가 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이원재 광주무등교회 목사

잔인한 5월이여! 이젠 희망을 가져다 주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잃어버린 소가 돌아왔습니까마는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엔 반드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진도 앞바다의 사고를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크나큰 성찰과 반성과 거기에 꼭 맞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대할 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 불감증, 언제부터 다 단어가 우리 곁에 생소하게 들리지 않았던가요? 인재(人災)란 말도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평범한 말로 들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일들이 너무나 여겨 구나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5월이 너무 잔인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까?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픔이 남아 있는 데 또 세월호의 참사라니. 이 참사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까요? 특히 유가족들의 가슴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위령탑을 세우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해서 가슴에 응어리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덧없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슬픈 히로에릭(喜怒哀樂)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의 역사가 사실대로 쓰여졌고, 오늘의 역사가 그대로 쓰여질 것이며, 내일의 역사를 또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텐데요.

사람마다 자기 역사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지게에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준엄합니다. 결코 과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과 후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을 떠나 정말로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연고의 해서 결정하는 일이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만은 정말로 일꾼을 뽑아봅시다. 역사가 자랑스러운 일을 한번 남겨 봅시다. 훗날 이번 선거만은 참 잘했다고 두고두고 그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꼭 한번 써 봅시다.

정치색, 지방색, 여야를 떠나 이번에만은 성숙한 우리 지역의 체면을 세워봅시다. 후보들은 '지역을 위해 남은 생애를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등 당신의 삶을 담보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꼭 실천하여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라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을 속이거나 망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기 고

‘세월호 참사’ 후폭풍 전세버스업계 올스톱



나승채 광주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이루며 1년 중 가장 큰 성수기다. 봄, 가을 성수기에는 전세버스 차량의 가동률이 100% 정도로 올라가며 성수기의 영업이익이 비수기인 여름, 겨울의 적자를 매우 크게 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물 사고로 관내 초·중·고교들이 예정했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광주지역 전세버스 가동률은 1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80% 이상의 전세버스차량이 올 스톱 상태가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5월 황금연휴를 포함한 봄철 관광성수기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일반인의 단체관광 또한 급감했으며, 공무원 연수나 기타 행사들도 대폭 취소되거나 축소돼 세월호의 후폭풍으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2차 피해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 해 매출을 결정짓는 성수기에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전세버스 업체들은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에 따라 호소는커녕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차량 할부금조차 내지 못해 도산, 부도의 위기까지 처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입찰계약의 특성 및 규정상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의 한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는 최

근 협회에 “세월호 침몰 이전에 학교와 1

년 행사 계약을 맺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올 봄 성수기를 보고 차량을 증차 했는데 앞으로 차량 할부금과 이자를 막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광주지역의 경우 세월호 침몰 이후 수학여행 등의 취소건수는 300여건에 취소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며 일반 행사를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업계손실은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 같은 상황은 2~3개월 지속된다면 2009년 신종플루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보다 더욱더 심한 최악의 경영난이 도래할 수도 있어 전세버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학여행은 학생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교육으로 학교 측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이며 학생들에게는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행사임에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행사중지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교육부에서는 1학기 수학여행단을 취소하고 근거리 현장 체험학습은 일정대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시달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 시기에 차량을 이용한 행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지원을 호소했으나, 일부 지원 내용은 여행업에만 해당되거나 제조업이 아닌 전세버스는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나 유예 등은 이자 납부 능력을 상실한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전 광주전세버스 업체 또한 안전문제 개선을 중요시 생각하고 차량 운행과 기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광주전세버스조합에서는 지자체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직후 25개 회원사에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와 업체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전세버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가 처한 어려움에 작은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19일 긴급 이사회와 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25개 회원사의 조합비를 2개월 감면하기로 결의하고 안전 관리에 최우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無等鼓

'자네 내 나에게 이르기'를 들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중략) 자네 여이고 아무래도 내 살 힘 없으니/ 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생에서 잊을 수가 없으니/ (중략) 이 편지 세세히 보시고/ 내 꿈에 세세히 와 보고/ 세세히 이르소/ 나는 꿈에 자네 보리라 믿고 일노이다/ 꼭 보소서.'

지난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상동 택지 개발지구에서 무

원이 엄마 편지

까지 열리는 '역사 속의 가족 편지'전을 통해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이 엄마 편지

와 함께 동자웃 등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만날 수 있다. 또 나주로 유배 온 정도전이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 동강대기로 '차'(茶)를 통해 40년 동안 우정을 쌓아 온 초의선사와 완당 김정희의 편지 등 흥미로운 자료 100점도 전시된다.

속도만을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낌의 미학인 오래된 손편지가 전하는 감흥은 색다르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등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을 만나보자.

스페셜'에서 방영됐고, 세계적인 고고학 저널인 '엔티퀴티'(ANTIQUITY) 2009년 3월호 표지에 실리기도 했다.

이후 무덤이 발견됐던 자리에는 원이 엄마상이 조성됐으며, 안동댐에는 미투리를 형상화한 목조다리 '월령교'도 놓였다. 안동시는 현재 20억 원을 들여 원이 엄마 테마파크도 조성 중이다.

부부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원이 엄마 편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7월 6일

까지 열리는 '역사 속의 가족 편지'전을 통해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이 엄마 편지와 함께 동자웃 등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만날 수 있다.

또 나주로 유배 온 정도전이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 동강대기로 '차'(茶)를 통해 40년 동안 우정을 쌓아 온 초의선사와 완당 김정희의 편지 등 흥미로운 자료 100점도 전시된다.

속도만을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낌의 미학인 오래된 손편지가 전하는 감흥은 색다르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등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을 만나보자.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수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